

수원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 대응 방안

김도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

이지원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

요약

수원시인구성장률 둔화 및 생산가능 인구 감소 전망

- (총인구) '90년대 후반 급격한 성장기를 지나 '24년 정체·감소 단계에 진입, '27년 인구 자연감소 시점 도래
- (인구성장률) '98년 6.94%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
- (인구구조) 전형적인 초고령 사회로 전환 중
- ☞ '94년 대비 '24년 유소년인구(16%p) 감소, 생산가능 인구(6%p) 및 고령인구(10%p) 증가 / '94년 대비 '40년 유소년인구(19%p) 및 생산가능 인구(6%p) 감소, 고령인구(24%p) 증가전망

저출산과 고령화로 부양압력 및 복지수요 증가 전망

- (합계출산율) '15년(1.29명)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'24년 0.73명
- (저출산 주요 원인) 자녀 양육비 부담(26.9%), 주거비 부담(22.9%) 순
- (중위연령) '24년 42.2세에서 '40년 49.4세로 7.2세 증가
- (노령화지수) 유소년(15세 미만) 1인당 고령자(65세 이상) 비율은 '24년 1.27명, '40년 3.4명 전망
- (1인 가구) '24년 1인 가구 비율은 36.2%(60대 이상 26.9%), '10년 대비 11.4%p 증가

정책제언

Active Senior 중심의 인식 변화('보호대상'→'가치창출 주체')에 따른 65~74세 액티브 존 일자리·사업화 필요

- 수원시는 노인 지원정책을 '연령형 감면 정책'에서 '활동·취약 지원형 바우처'로 전환해 노령연령 상향(65→70세)에 따른 투자로 재구조화
- 뉴시니어 인턴십(65~69세), 시니어 소상공·사회적기업 랩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 및 일자리 창출 도모

“사라지는 인구, 흔들리는 집값” 시대의 수요순응형 주거정책 마련

- 고령친화 리모델링 바우처 제공(욕실 미끄럼·문턱 제거·난방·조명) 및 재산세 유예 또는 분납으로 거주 지속성 보장
- 70세 이상이 소유하는 주거의 유희공간을 청년·돌봄인력과 공유(안전·보험·임대차 표준계약 제공) 할 수 있는 홈세어·방짜개기 가이드라인 마련

1. 서론

□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의 대응정책은 세계의 관심사

- 전 세계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및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,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저출산·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주목 받고 있는 실정
 - OECD·UN 통계에 따르면, 고령사회 진입 속도('00년 7%→'17년 14%)와 초고령사회 도달 속도('17년 14%→'24년 20%) 모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로 한국이 지정됨
 -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 진입 시기는 늦었지만, 일본보다 고령사회 진입까지 7년 더 빠르고, 초고령사회 진입도 훨씬 앞당겨질 예정이며, 이는 사회복지, 노동시장, 주거, 도시계획 등 전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국가임을 의미
-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.24명에서 2024년 0.75명으로 감소하여 전 세계 217개 국가·지역 중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음
 - 통계청(2023)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30년을 기점으로 5,000만 명보다 적어지며, 2050년에는 약 4,730만 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강남구는 2024년 출생아 증가율 14.43%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, 첫째 아이 낳으면 첫 달 790만 원 혜택을 제공하는 등 27개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 중
 - 성남시 분당구는 인구는 줄었지만 세대수는 늘어나는 1인 가구 증가 현상을 보이며, 65세 이상 인구가 14.8%를 차지
-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,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9.0%에 달함
 - UN의 인구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46년부터 일본을 넘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되며, 2062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¹⁾

□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위해 수원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

- 수원시 2024년 출생아 수는 6천500명으로, 10년 전인 2015년 1만2천36명에 비해 46% 감소하는 등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겪고 있으며, 2024년 합계출산율 또한 0.73로 경기도(0.79), 전국(0.75)보다 낮은 수준²⁾
- 수원시의 인구구조 변화, 출산율, 고령화, 외국인 비율, 가구 형태 등 다양한 인구·사회적 지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수원시가 직면한 인구·사회적 문제와 변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
 - 수원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인구구조, 가족 형태, 경제 활동 등 다양한 사회학적 특성에서 뚜렷한 변화를 겪고 있음
 -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여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고, 새로운 시정 운영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기 도래

1) 한국은행, 「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(1): 심각성과 그 원인은?」, 2023.12.06

2) 통계청, 「인구동향조사」, 시군구/출생아수, 합계출산율

2. 수원시 인구구조 변화

1.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

- ✓ 수원시는 1990년대 후반 급격한 성장기를 지나 2024년 현재 인구 정체·감소 단계에 진입
 - ☞ (원인) 초저출산 현상, 신규 주택공급 둔화, 인접 도시의 인프라·개발 확대로 인구 분산
 - ☞ (문제점) 소비인구 감소로 지역경제 위축, 지방세 수입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
 - ☞ (대응방안) 청년층 주거안정 및 일자리 창출, 고령인구 기반 복지체계 구축 등

- 수원시 총인구는 1994년 약 73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약 120만명 수준에 도달
- 인구성장률은 1998년 6.94%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
 - 1990년대 후반 개발과 도시 확장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 → 2000년대 이후 도시규모가 포화상태로 총인구 증가 둔화 → 2010년대 이후 약 0%대의 낮은 인구성장률 → 2024년 인구성장률 감소 뚜렷

<총인구 및 인구성장률¹⁾>

(단위 : 명, %)



자료 :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

1) $\{(\text{해당연도 주민등록인구} - \text{전년도 주민등록인구}) / \text{전년도 주민등록인구}\} * 100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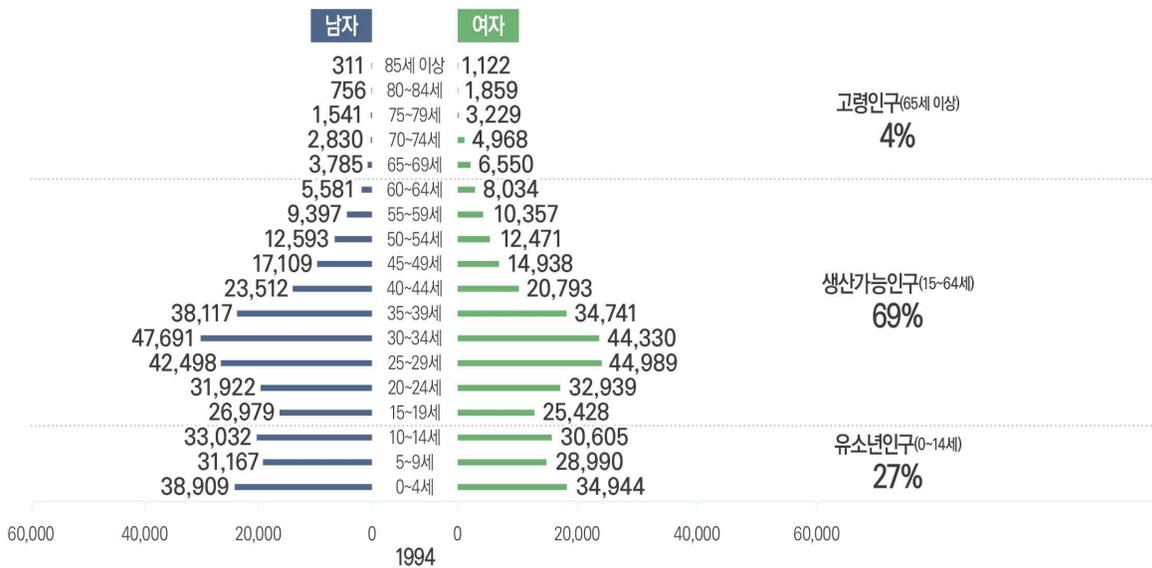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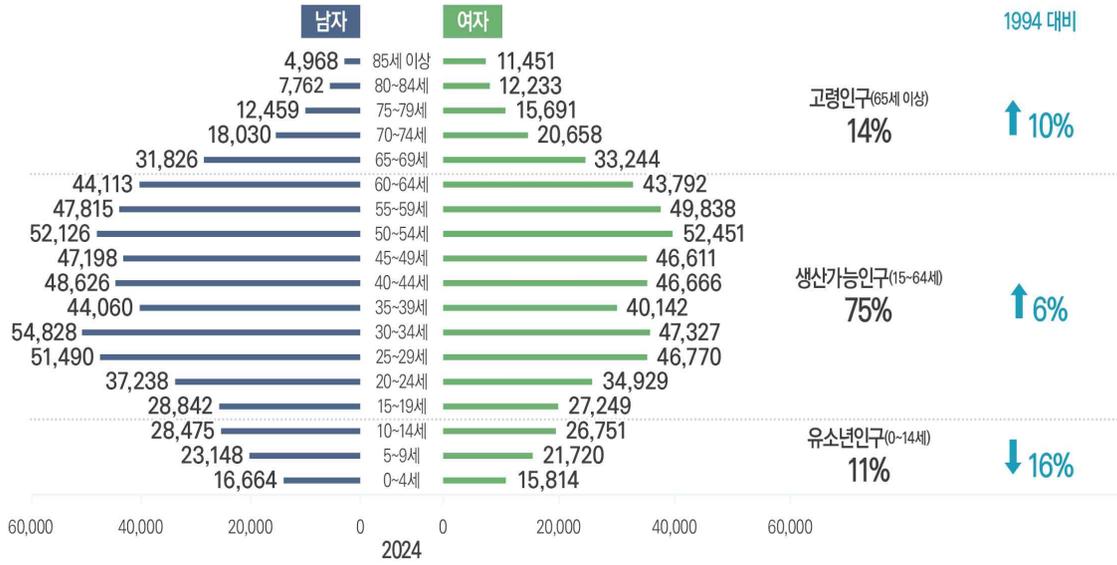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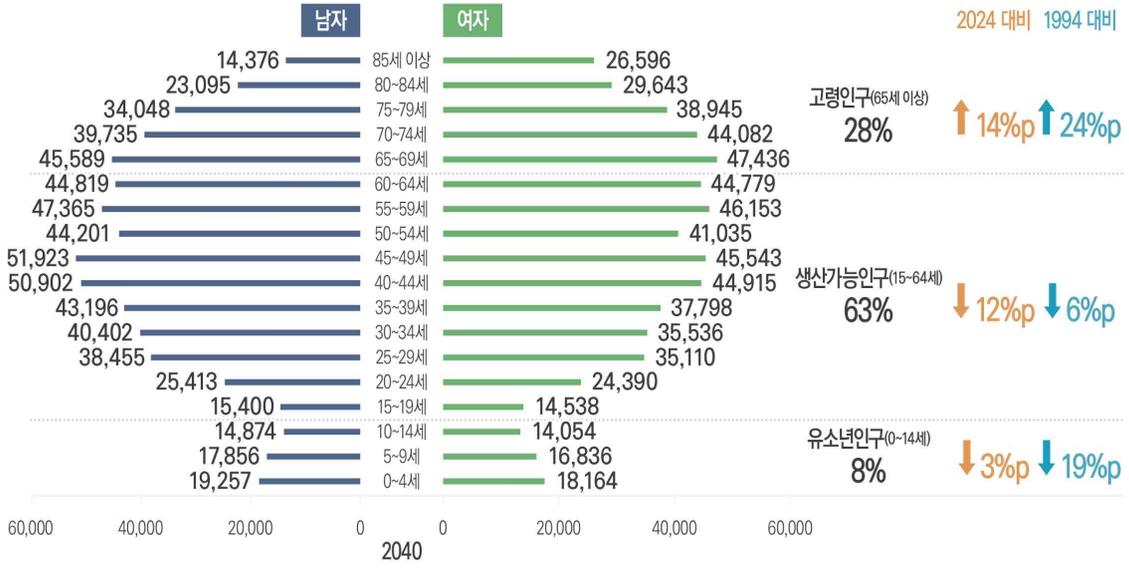
2. 인구구조 변화 전망

- ✓ 수원시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초고령 사회로 전환 중이며, 부양 부담과 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☞ (원인) 동일 세대(코호트)의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연령 이동 반영 → 고령 사회 도래
 - ☞ (문제점) 노동력 부족, 세수감소, 복지수요 급증, 생산가능 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비생산 인구 증가
 - ☞ (대응방안) 청년유입 유도, 정주여건 개선으로 생산가능 인구 유지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

- 1994년 대비 2024년 유소년 인구(16%p)는 감소한 반면, 생산가능 인구(6%p)와 고령 인구(10%p)는 증가하였으나, 2040에는 1994년 대비 유소년 인구(19%p)와 생산가능 인구(6%p)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(24%p)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수원시의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고령사회로의 진입 경로를 보이고 있으며,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층 증가는 향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

<인구구조 변화>

(단위 : 명)



자료 :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도별·연령별 인구현황

3. 장래인구추계

- ✓ 수원시는 2027년 인구 자연감소 시점 도래, 중위연령은 '24년 42.2세에서 '40년 49.4세로 7.2세 증가
- ☞ (원인) 출산기피 현상, 기대수명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('55년~'74년생)의 고령 진입
- ☞ (문제점) 인구 자연감소로 지역 쇠퇴, 고령층 복지비 증가, 노동력 부족
- ☞ (대응방안) 스마트산업, 문화콘텐츠 등 성장 산업 육성으로 청년층 유입, 30~50대 중장년층의 재정착을 위한 정주 인프라 강화, 외국인 유학생, 이민자 유입 정책 활성화와 지역 정착 유도 등

- 수원시 총인구는 2027년까지 증가하여 123만 4천명으로 예측, 이후 2040년 121만 6천명까지 감소 전망
- 수원시 중위연령은 2024년 42.2세에서 2040년 49.4세로 16년간 7.2세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2040년에는 수원시 인구 절반이 50세에 해당되며,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젊은 층 비중이 줄고, 고령층 비중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
- 수원시 출생아수 감소와 사망자수 증가의 교차점은 2033년으로 예상
 - 출생아수는 '36년 7천9백명을 정점으로 감소, 사망자수는 '24년 5천9백명에서 '40년 약1만명으로 증가 전망



자료 : 경기통계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

인구성장률 = $\ln\left(\frac{P_t}{P_0}\right) / T \times 100$ (* P_0 = 기준연도 인구, P_t = t년도 인구, T=비교기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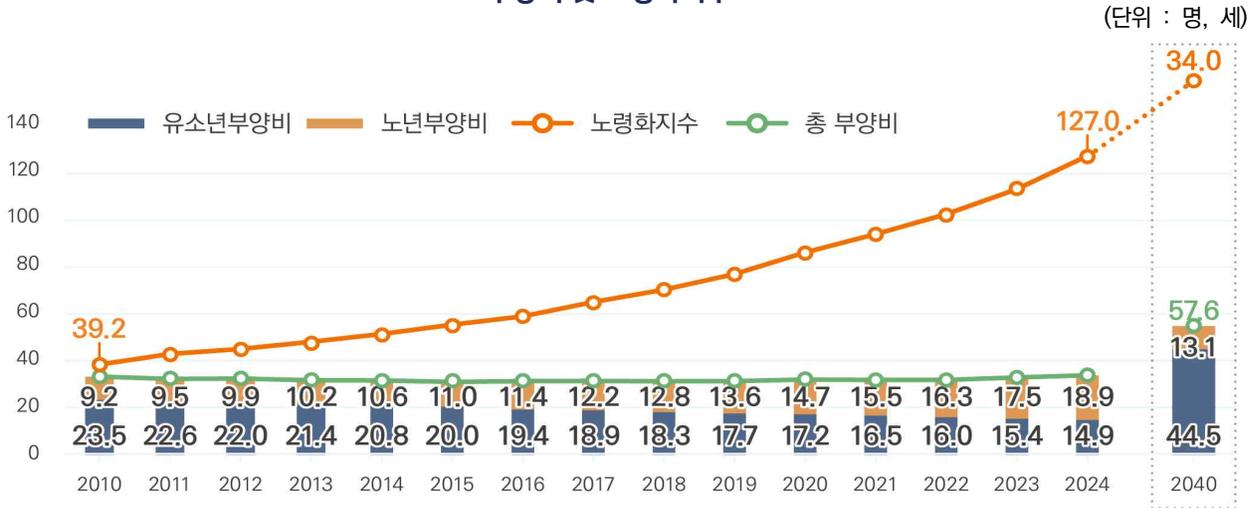
중위연령 = $L + \left[\left(\frac{N}{2} - F\right) / f\right] \times w$ (* L= 중위연령이 속한 구간의 하한 나이, N=전체 인구수, F=중위연령 구간 이전까지의 누적 인구수, w= 구간 너비)

4.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

- ✓ 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인구(유소년+노년)는 '24년 0.337명에서 '40년 0.576명으로 증가, 유소년(15세 미만) 1인당 고령자(65세 이상)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'24년 1.27명에서 3.4명으로 증가 전망
- ☞ (원인) 고령 인구의 가파른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유소년 인구의 감소가 원인으로 작용
- ☞ (문제점) 경제적 부담 증가, 세대 간 갈등, 사회보장 시스템 압박
- ☞ (대응방안) 고령층 부양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 대응(노노케어 등), 세대 간 통합 공간 운영(어린이-노인 공용 공간 등)으로 돌봄 효율화 등 필요

- 2024년 기준 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0.337명, 유소년 1명 대비 노령인구는 1.27명
 - 2010년과 2018년 대비 2024년 유소년부양비 감소, 노년부양비 증가
- 장래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는 2040년 기준 총 부양비(57.6명), 노령화지수(340명)으로 전망되며 2024년 대비 총 부양비는 약 1.7배, 노령화지수는 약 2.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

<부양비 및 노령화지수>



년도	총부양비 ¹⁾	유소년부양비 ²⁾	노년부양비 ³⁾	노령화지수 ⁴⁾
2040	57.6	13.1	44.5	340.0
2024	33.7	14.9	18.9	127.0
2018	31.1	18.3	12.8	69.9
2010	32.7	23.5	9.2	39.2

자료 :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

- 1) 유소년부양비+노년부양비 :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(15~64세) 100명당 부양해야하는 유소년(15세 미만) 및 고령 인구(65세 이상)로서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부양해야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
- 2) 생산가능연령(15~64세)인구에 대한 유소년(0~14세)인구, 3) 생산가능연령(15~64세)인구에 대한 노령(65세이상)인구
- 4) 유소년(0~14세)인구에 대한 노령(65세이상)인구 : 노령화지수는 유소년 인구(15세 미만) 100명당 고령 인구수(65세 이상)이며 지수가 높을수록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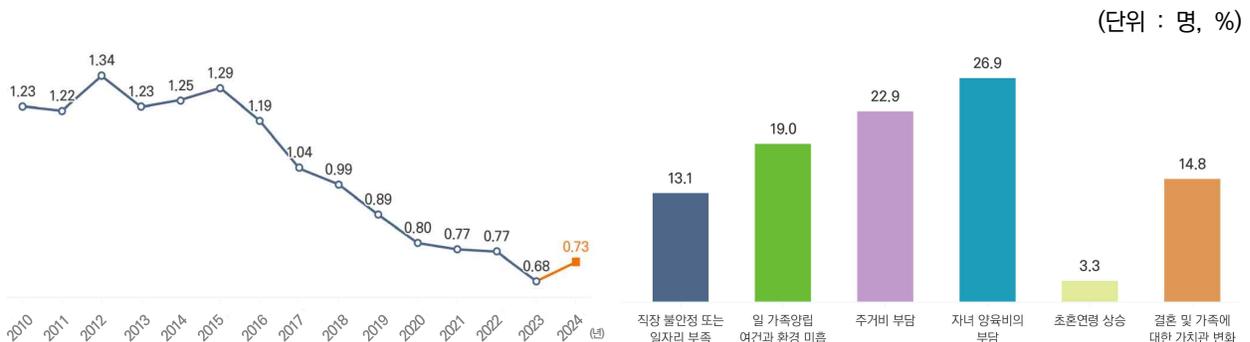
5. 합계출산율 및 저출산 원인

✓ 수원시 합계출산율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후 2024년 반등세, 저출산 원인은 「자녀 양육비 부담」과 「주거비 부담(비싼 주택가격 등)」 때문

- ☞ (원인)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, 양육비 부담 및 주거비 부담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일·가정 양립의 어려움
- ☞ (문제점) 학교, 보육시설, 교육서비스의 불균형에 따른 과잉투자 우려, 출산율 차이로 인한 지역 불균형
- ☞ (대응방안) 주거+보육인프라+노동시장 안정성이 결합된 주거·육아·일자리 통합 정책 확대 필요

- 2024년 수원시 합계출산율은 0.73명으로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1.23~1.34명 사이의 출산율을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최저 합계출산율 이후 반등함
- 2024년 기준 수원시 저출산 원인은 1순위 「자녀 양육비 부담」, 2순위 「주거비 부담(비싼 주택가격 등)」 순

<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 및 저출산 원인>



자료 : 통계청 인구동향조사(출생, 사망), 수원시 사회조사(2024)

6. 인구이동

- ✓ 순이동은 도시의 개발 영향에 따라 증감 반복, 수원시 전입 전·전출 후 거주지 모두 “화성시”가 가장 많음
- ☞ (원인) 신도시(광고·호매실) 개발효과, 인접지역의 주거 매력도 향상 등은 전입 및 전출 증감에 영향
- ☞ (문제점) 신도심은 주택가격 고가 및 공급부족, 구도심 노후화로 이탈 가중 ☞ 순유출 지속 시 지역경제 위축
- ☞ (대응방안) 구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신축 공급으로 신도심 집중도 분산, 비주거용 공실 공공자산을 청년주택 및 공동주거지 등으로 확대 등

● 수원시 순이동은 지역 내 또는 인접 도시의 개발 영향에 따라 증감 반복 추세

- 수원시의 순이동(전입-전출)은 '12년 2만 4천명으로 순유입 정점에 이룸, 이후 순유입 규모가 감소하여 '20년 순유출(1만1천명) 도달, 이후 증가하여 '22년 순유입(7천명) 회복, '24년 다시 순유출(5천명)로 전환

● 14년간 평균 통계를 보면 평균 총 전입 181,105명, 평균 총 전출 178,469명으로 평균 순이동 2,636명 증가

<인구이동>



구분	2010	2012	2014	2016	2018	2020	2022	2024
총전입 ¹⁾	184,402	200,113	196,453	172,210	187,806	168,204	166,718	151,826
총전출 ²⁾	197,102	175,865	178,195	169,975	193,564	179,518	159,012	157,015
순이동 ³⁾	-12,700	24,248	18,258	2,235	-5,758	-11,314	7,706	-5,189

자료 : MDIS 국내인구이동통계

1) 경기도내 타시군에서 전입+타도에서 전입+수원시내 이동

2) 경기도내 타시군으로 전출+타도로 전출+수원시내 이동

3) 전입-전출 : 수원시로 들어온 인구와 나간 인구의 차이로, 양수는 인구 유입(순유입), 음수는 인구 유출(순유출) 의미

● 2024년 기준 수원시 전입 전과 전출 후 거주지는 모두 “화성시”, 최근 평택시 전입·전출 증가

- (수원시 전입 전 거주지) 2024년 이전까지 화성시와 용인시가 1순위와 2순위 반복. 2024년 화성시가 1순위
- (수원시 전출 후 거주지) 최근 15년간 “화성시”가 가장 높은 순위 차지
- 화성시 이외에 최근 15년간 전입 전 거주지 비율은 안양시보다 평택시가 높아졌고, 전출 후 거주지 비율은 안양시와 안산시에서 오산시와 평택시 증가

<수원시 전입 전과 후의 거주지>

(단위 : 명, %)

순위	2010			2015			2020			2024			
	지역	전입자수	구성비										
전입 전 거주지	1	화성	13,088	13.6	용인	11,900	11.7	화성	10,740	11.9	화성	9,550	11.1
	2	용인	7,802	8.1	화성	10,158	10.0	용인	9,937	11.0	용인	8,942	10.4
	3	안산	3,354	3.5	안산	3,955	3.9	성남	3,355	3.7	성남	3,059	3.5
	4	안양	2,719	2.8	성남	3,849	3.8	안양	2,763	3.1	안산	2,406	2.8
	5	성남	2,540	2.6	안양	3,506	3.5	안산	2,491	2.8	평택	2,236	2.6
전출 후 거주지	1	화성	18,602	17.1	화성	24,528	24.7	화성	21,536	21.2	화성	16,046	17.6
	2	용인	13,050	12.0	용인	10,278	10.3	용인	11,848	11.7	용인	11,094	12.1
	3	안산	7,636	7.0	성남	2,508	2.5	오산	3,517	3.5	오산	4,372	4.8
	4	오산	3,048	2.8	오산	2,387	2.4	성남	3,281	3.2	성남	3,137	3.4
	5	안양	2,965	2.7	평택	2,121	2.1	평택	3,255	3.2	평택	2,673	2.9

출처 : 통계청, 「국내인구이동통계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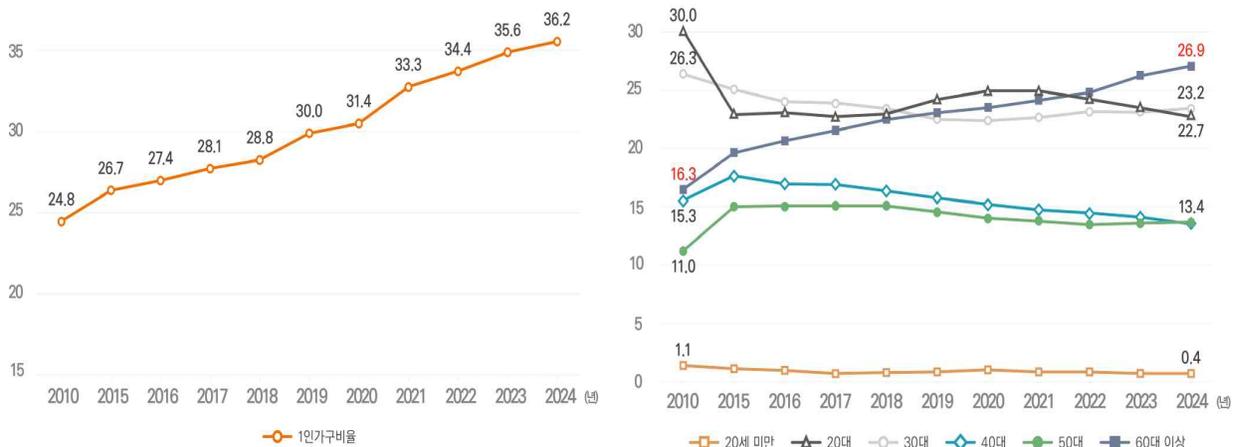
7. 1인 가구

- ✓ '24년 수원시 1인 가구 비율은 36.2%(60대 이상 26.9%)로 '10년 대비 11.4%p 증가
- ☞ (원인) 취업·주거 불안정, 가치관 변화로 인해 비혼·만혼 확산, 배우자 사망, 자녀 독립, 이혼 증가 등으로 60대 이상 1인 가구 증가, 원룸, 오피스텔, 공유주택 등의 확대로 혼자 살기 쉬운 도시환경 형성
- ☞ (문제점) 고령층은 건강 악화, 고독사, 정보 소외 등 위험이 높고, 청년층은 정신적 고립, 우울감, 취업불안 문제 동반
- ☞ (대응방안) 1인 가구 특화 주거정책 도입(소형 임대주택, 공유주택, 세어하우스, 장기임대 등), 고령 1인 가구 전수 등록제 및 모니터링(고독사 예방 등) 시행

- 수원시 1인 가구는 2010년부터 증가 추세, 2024년 36.2%로 2010년 대비 11.4%p 증가
- 60대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26.9%로 가장 높고, 30대(23.2%), 20대(22.7%) 순

<성별 및 연령대별 1인 가구>

(단위 : %)



자료: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, e지방지표 1인가구 비율

3. 정책적 시사점

□ 수원시는 출생아 수 감소, 합계출산율 하락, 중위연령 증가 등 인구 자연감소와 부양 부담 심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형적인 저출산·초고령화 사회 직면

- (인구감소) 수원시 총인구는 199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나 인구성장률은 1998년 6.94%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☞ 1990년대 후반 급격한 성장기를 지나 2024년 인구 정체·감소 단계에 진입
- (심각한 저출산) 수원시 합계출산율은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1.23~1.34명 사이를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 ☞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비 부담(26.9%)과 주거비 부담(22.9%) 때문
- (급속한 고령화와 부양압력 증가) 2024년 기준 총부양비 33.7명에서 2040년 57.6명, 노령화지수 340 전망, 중위연령 49.4세로 7.2세 증가 ☞ 생산가능 인구(15~64세)가 부양해야 할 유소년(15세 미만) 및 고령 인구(65세 이상)의 증가(2040년 유소년인구 1명당 노인인구 3.4명)로 부양 압력과 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 전망
- (1인 가구 급증과 고령화) 1인 가구 비율 36.2%('24), 그중 60대 이상이 26.9%로 최다 ☞ 1인 가구 증가는 사회적 고립, 고독사,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야기
- (생활권은 전입 및 전출 증감에 영향) 인접 화성시와의 전입·전출 규모가 가장 크고, 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구도심 이탈·신도심 집중이 병존 ☞ 순이동은 도시의 개발 영향에 따라 증감이 반복되나, 수원시의 도시개발은 포화상태로 순유출 지속 시 지역경제 위축

□ 수원시의 노인정책은 “연령에 따른 지원”에서 “필요·역할에 대한 맞춤형 지원”으로 인식 전환 필요

- Active Senior 중심의 인식 변화(‘보호대상’ → ‘가치창출 주체’)에 따른 65~74세 액티브 존 일자리·사업화 필요
 - 수원시는 노인 지원정책을 ‘연령형 감면 정책’에서 ‘노인 활동·취약 지원형 바우처’로 전환해 노인 연령 상향(65→70세)에 따른 투자로 재구조화
 - 뉴시니어 인턴십(65~69세) 제공 : 지역 공공·사회서비스, 도서관·문화시설, 학교 안전·급식, 혁신행정 보조 등에 유급 배치. 민간기업에는 장년 고용 인센티브(시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) 등
 - 시니어 소상공·사회적기업 랩 운영 : 은퇴 전문역량(회계·품질·세무·영업)을 고도화하여 동네가게·사회적경제와 멘토-파트너 매칭을 통해 경제적 자립 및 일자리 창출 도모

□ 수원시 도시개발 방향은 고령사회에 선제 대응을 위한 구도심 재생·주거 순환·이동권 강화

- “사라지는 인구, 흔들리는 집값” 시대의 수요순응형 주거정책 마련
 - 고령친화 리모델링 바우처 제공(욕실 미끄럼·문턱 제거·난방·조명) 및 재산세 유예 또는 분납으로 거주 지속성 보장
 - 홈케어·방짜개기 가이드라인 마련 : 70세 이상이 소유하는 주거의 유희공간을 청년·돌봄인력과 공유(안전·보험·임대차 표준계약 제공)
 - 비주거 공실을 주거·커먼즈로 전환(사적소유→공동체 공유·관리) : 청년·액티브시니어 공동주거, 수원형 마을케어거점 조성
 - 생활권 연계 교통패스 : 화성·용인 등 통근 생활권 연계형 교통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연결



SRI 수원시정연구원
SUWON RESEARCH INSTITUTE

Brief

※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| 발행인 김성진 | 편집위원장 정재진 | 편집위원 강은하 김도훈 김타균 유현희 최석환 한연주